



“예술과 역사 겹쳐 읽기”

김정희의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  
영국 정부와 예술 정책』(2010)

황혜진

보통 미술을 업으로 하는 이들은 미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들은 역사에 대해서만 써내며, 정책을 연구하는 이들은 정책에 대한 논의만 전개한다.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전공분야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서 오직 그것만이 중요한 것인 양 파고들며 소통하되,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향해선 눈을 감아버리곤 한다. 그리고, 사실, 자신의 주력 분야 하나에 통달하는 것도 어지간한 이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형편을 감안하면, 이번에 김정희 교수가 펴낸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 영국 정부와 예술 정책』은 참으로 놀라운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미술(예술), 역사, 정책, 행정, 경영 등 여러 분야의 경계를 가볍게 넘나들며 방대한 규모의 지식들을 하나의 틀 안에 촘촘하게 엮어내고 있다.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심지어는 참고문헌에서도 저자의 능력과 열정이 묻어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엄청난 작업을 통해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 기관들에 대한 국가 보조의 ‘의무’가 수행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립미술관/박물관은 상설전의 무료 입장을 고수하고, 음악당은 저렴한 음악회 표를 제공하는” 영국 예술계와 그 뒤를 받치고 있는 영국 정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영국 국가의 예술 지원 정책과 그와 연계되어 나타난 미술 분야의 변화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추적한다. 저자는 18세기와 19세기, 20세기 초부터 대처 정부 이전까지, 대처 정부 시기와 그 이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 작업을 수행한다.

그 첫 번째 시기의 출발점은 바로 1759년 1월 세계 최초의 국립 박물관인 대영 박물관(British Museum)의 개관이다. 박물관은 그 소장품을 무료로 보고 음미하기 위해 접근하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정부는 이 박물관이 국민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영광과 명예를 드높이는 상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후 1824년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가 대영 박물관의 선례를 따라 대중에게 개방되었으며, 19세기 중반 이후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National Portrait Gallery),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 등이 속속 등장했다. 이 시설들은 모두 영국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고, 따라서 그 운영의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에게 돌아갔다. 이 시기 영국 정부는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복지라는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위해서 국가가 예술을 경제적으로 보조할 의무가 있

다고 믿고 있었고, 지배 계층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국민 또는 제국(帝國)민을 통합시키는 기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국민들의 도덕성을 높이고, 그들을 높은 문명의 수준으로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시기 영국 정부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하는 데 있어 수동적인 심지어는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면 미술관의 경우 대부분이 먼저 개인이 소장품을 기증한 후에 국가가 그것에 권위를 실어주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게다가 국가는 개인의 소장품을 구입한 후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 하지 않았고, 유행처럼 등장하는 공공 미술관에는 마지 못해 자금을 대고 인색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영국 정부는 국립 미술관이 처음 등장하던 때부터 예술을 지원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청교도 정신의 지배, 자본주의의 조속 등 영국 사회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정부가 속으로는 꺼렸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예술 보조 원칙은 20세기에든 지속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두 번째 단계는 20세기 전반기부터 1970년대까지를 포괄한다. 이 단계는 동질적인 시기로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그 안에서 다시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영국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이전 시대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특히 순수 미술 분야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부터 국가는 복지 국가의 이상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교육과 문화 분야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역시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194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영국 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미술 분야도 가장 확실하게 정부 보조의 혜택을 누렸던 때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팔 길이 거리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준수하여, 각 기관의 주요 인사들의 임명권과 같은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각 기관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해 주었다. 이 시기 정부의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정부와 예술 분야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조직이 바로 영국예술회의(ACGB)이다. 이 기구는

1946년 케인즈의 주도 하에 국가의 기금은 받지만 그 제재로부터는 자유로운 반(半)독립적 기구, 즉 의사자치공공기구(quango)로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에 그 황금기를 구가하며 문화 예술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ACGB는 복지 국가의 이상과 케인즈 식의 ‘문화주의’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고, “(정부가) 예술 생활을 문화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되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영국 사회는 심각한 경제 문제로 인해 점차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예술의 영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ACGB를 비롯한 의사자치공공기구들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다소 난해하며, 때때로 퇴폐적이라는 평을 받았던 미술 장르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고, 대중적이고 복고적인 예술에 대한 향수가 점점 짙어졌다. 영국인들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유적에 집착하고 전통적인 회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핑크로 대변되는 서브컬처가 발흥하고 있었다. 영국 사회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로 합의의 시대에서 이탈하여 대처 시대로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마지막 시기는 1979년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유명한 마가릿 대처가 수상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시작된다. 대처는 전후 영국 사회를 지배했던 복지 국가의 이상과 사회적 합의를 폐기하고, 사회 전분야에 걸친 개혁 혹은 혁명을 추진했다. 그녀는 시장 경제 논리와 기업 문화 정신을 신봉하여, 경제 전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영역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원칙은 예술 분야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도 도입되었다. 대처 정부는 공공 기관 민영화 원칙에 따라 예술 분야에 대한 경제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국공립 예술 기관들이 직접 나서 민간 부문으로부터 기금을 끌어올 것을 요구했다. 재정 분야에서 국가가 철수하여 생긴 공백의 상당 부분은 사적 영역의 스폰서십을 통해 채워졌다. 한편 정부가 각종 기구들과의 경제적인 유대는 약화시키면서도 그 행정적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더욱 강화함에 따라 사실상 “팔 길이 거리의 원칙”은 유명무실해졌다. 이제 예술 분야에서도 경제 가치가 제일 원칙으로 통용되었고, 예술의 존립이 ‘돈을 위한 가치’에 의해 좌우되었다. 문화와 예술은 ‘문화 산업’을 지향하고, 이 분야 종사자들은 기업 경영인의 역할을 맡았다.

이처럼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영국 미술은 과거와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복고적, 보수적, 전통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장년층 미술가들이 화단을 주도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동시대적이고 세계적인 형태의 미술이 영국과 세계의 미술계를 주름 잡았다. 1988년 “프리즈”전을 통해 등장한 “젊은 영국 미술가들(yBas)”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여기에 속하는 일군의 작가들은 달라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미적 환경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새로운 영국의 이미지를 내세워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대처의 뒤를 이은 존 메이저의 보수당 정부와 토니 블레어의 신(新) 노동당 정부 모두 대처의 문화 및 예술 정책을 계승하고 그녀가 남긴 유산을 보존했다. 메이저는 특히 국립 복권(National Lottery)을 통해 예술 분야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했고, 이 제도는 1990년대 영국의 문화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블레어는 그 선임 정부가 세운 민간 발의 자금 조달(PFI)을 수정 계승하여,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형태로 운영하였다. 물론 노동당 정부는 이전 보수당 정부와 달리 “사회적 포함”이라는 개념을 동원하고 “접근”을 강조하여 국민들이 예술에 접근하는 방법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본적으로 대처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대처 이후의 정부들은 모두 예술의 경제적 중요성과 ‘돈을 위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블레어 정부가 돈을 위한 가치와 접근의 확대를 동시에 추구한 것은 모순적이지만, 이 문제의 해결책을 문화 산업 또는 “문화 경제(Cultural Economy)”에서 찾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영국 정부의 예술 정책은, 그것을 둘러싼 영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지난 250여 년 동안 변화를 거듭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저자가 책의 전반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이며 행위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당대의 지배적인 가치가 포함되며 지배 계급의 인식이 투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의 구분에 따라 각 시대별 정책의 핵심 또는 원칙을 짚어보면 꽤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8-19세기에는 문명화의 사명이 정책 결정자들을 이끌었으며, 20세기 전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문화주의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했고, 대처 시기부터 지금까지는 기업문화의 논리가 두드러진다.

이처럼 국가, 정치, 정부, 정책의 틀 속에서 예술의 전개 및 발전을 이해하려는 저자의 시도는, 이미 글을 시작하면서 밝혔듯이,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 핵심적인 문제 의식을 명확한 논리와 방대한 정보를 통해 발전시키고, 그 결과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의 그릇에 너무 많은 내용물을 담는 바람에 곳곳에서 미세한 균열들이 발생했음이 감지된다. 즉,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적 구성이 강점인 동시에 약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세부적인 문제들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시대 구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저자는 크게 18-19세기, 20세기 초부터 대처 정부 전까지, 대처 정부와 그 이후, 세 시기로 나누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앞서 내용을 살피면서 언급했듯이, 이 두 번째 시기를 동질적인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저자도 인정하고 있듯이 1930년대까지 영국 정부의 예술 정책은 이전 세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따라서 1939년 음악 예술 장려 회의(CEMA)가 설립되어 예술 정책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1941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출되어 복지 국가의 이상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18-19세기의 원칙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1940년 경)에 이르는 시기를 단일한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된 첫 번째 기간으로 파악하고,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중·후반까지를 두 번째 기간으로 상정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생각해볼 문제는 영국 국가 또는 영국 정부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18-19세기를 통틀어 영국 정부가 예술 분야 지원에 인식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 영국 정부의 성격 상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당시 영국인들은 자유방임주의 원칙에 충실하여 ‘작은 국가/정부’가 좋은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정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의 일에 개입하고 나서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비단 예술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역할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고, 다른 국가들보다 한참 늦게 그 역할을 떠맡았다.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국가가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고 이때도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그 중심이 되었을 정도였다. 본문에서 저자는 청교도 정신의 지배, 자본주의의 조속과 같은 영국 ‘사회’의 특수성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설명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영국의 ‘정치적’ 전통에서 기인한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 영국 정부와 예술 정책』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장 흥미로운 주제 가운데 하나는 미술과 정체성 사이의 관계이다. 사실, 영국인들의 국가 정체성은 (단일 민족임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경우와 달리) 상당히 복잡하고 가변적이다. 영국성(Britishness)과 잉글랜드성(Englishness)은 동행하기도 하고 때때로 충돌하기도 한다. 잉글랜드성과 스코틀랜드성(Scottishness)은 더 자주 부딪친다.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취하기도 하고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는 버리기도 한다. 이에 아직까지도 많은 역사가들이 이 문제를 붙들고 고심하고 있으며, 서로 주장과 반박을 주고 받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문화이다. 이 점에서 저자가 미술 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면서 정체성을 함께 논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논의가 피상적인 데 머물고 있으며, 때로는 그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용어 상의 혼란에서 기인하며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체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사 용어 및 고유 명사 또는 역어(譯語)의 사용과 관련하여 작은 실수들이 눈에 띈다. 비전공 분야의 성과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정착된 용어나 역어가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살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소소한 예를 들자면, 1832년의 ‘Reform Act’는 선거법 개혁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인 ‘Prince Albert’는 앨버트 공(公)이라고 적는다.

물론 이러한 작은 오점들이 이 거대한 지적 성취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듯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단일한 문제 의식 아래 규합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자신만의 결론을 제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제언까지 제공한 것은 분명 대단한 성과이다. 특히나 학문 분과들 사이의 벽이 두꺼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문명화, 문화주의, 기업문화: 영국 정부와 예술 정책』은 미술, 문화, 정책, 영국, 역사(그 가운데 미술사, 문화사, 정치사, 사회사, 어떤 분야이건),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관심이 있다면 읽어봐야 할 책이다.